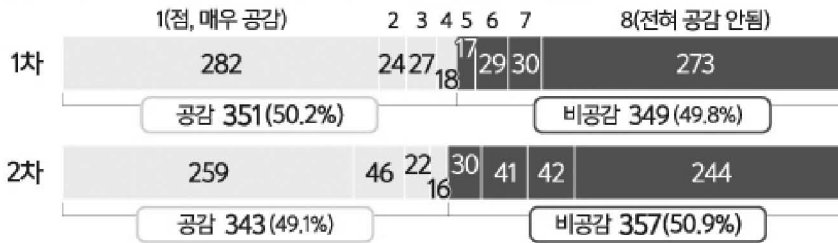




〈세계일보〉는 8월 28일 ‘신고리 원전 중단’에 대해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숙의형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조사는 이슈에 대해 단순히 찬반 의견만 묻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달리 이슈에 얽힌 상대방 논리를 접하고, 그 후 기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아보는 방식을 취했다.”면서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숙의형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밝혔다. 기사 내용을 전재한다.

### ‘신고리 원전 중단’ 성인 700명 국내 첫 온라인 숙의형 여론조사 “5명 중 1명 원전 찬반 의견 한 번 이상 바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단위: 명, 총 700명 응답)



\* 자료 : 22~23일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700명 조사, 세계일보·공공의 창·우리리서치 공동조사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관련해 ‘숙의형 온라인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5명 중 1명은 답변 과정에서 한 차례 이상 의견을 바꾸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원전에 대한 쟁점을 접한 후 찬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도 확인됐다.

세계일보는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과 함께 지난 22~23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숙의형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이슈에 대해 단순히 찬반 의견만 묻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달리 이슈에 얽힌 상대방 논리를 접하고, 그 후 기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아보는 방식을

취했다.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숙의형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처음에는 ‘신고리 원전 건설중단에 공감한다’는 의견(351명·50.2%)이 비공감한다(349명·49.8%)는 쪽보다 2명 많았다.

그러나 쟁점 검토 후 최종적으로 건설 중단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묻자 공감 343명(49.1%), 비공감 357명(50.9%)으로, 비공감한다는 의견이 14명 더 많아졌다. 공감에서 비공감으로 8명이 이동한 셈이다. 다만, 백분율로는 쟁점 검토 전·후 모두 오차범위 내 백중세를 보여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을 둘러싼 팽팽한 찬반 여론 흐름을 보여준다.

응답자들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에 앞서 경제성, 환경영향, 전력수급, 안전성 등 네 가지 갈등 요소에 대해 본인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검토했다. 네 차례 의사결정 과정에서 153명(21.9%)이 건설중단 공감→비공감, 혹은 비공감→공감으로 한 차례 이상 의사를 바꿨다. 처음 입장을 고수한 사람은 공감·비공감 각각 275명, 272명으로 비슷했다.

쟁점 가운데 경제성과 전력수급 문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건설 중단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더욱 굳히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와 반대로 환경과 안전성 문제는 ‘건설 중단’의견을 고수하도록, ‘건설 중단 반대’의견은 다시 생각해 보게끔 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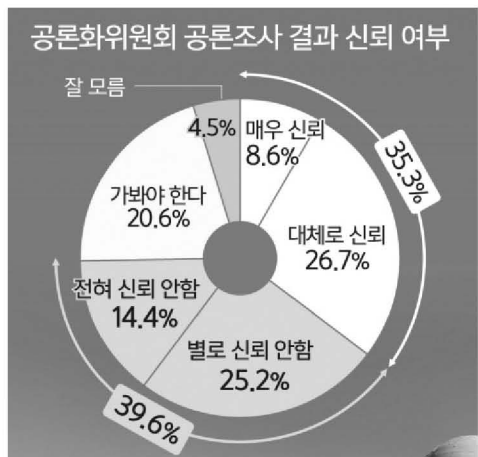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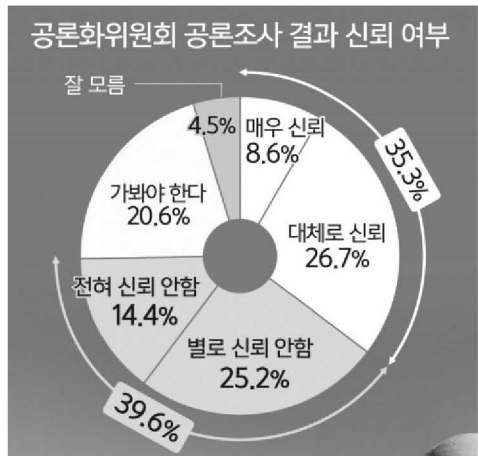
정주진 평화갈등연구소 소장은 “이번 결과는 응답자들이 원전과 관련해 충분한 정보와 우려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결국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단순 여론조사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 ‘신뢰 vs 못 믿어’ 의견 팽팽...시험대 오른 공론화위

숙의형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들이 ‘매의 눈’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공론조사 결과에 어느 정도 신뢰하겠는가를 묻는 질문에 ‘신뢰하지 않는다’가 39.6%로 ‘신뢰한다’는 답변(35.3%)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가 봐야 알겠다’는 응답은 20.6%를 차지했다.

현재 공론조사에 대한 신뢰가 반반인 상황에서 앞으로 공론화위가 얼마나 중립을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바꿔 말하면 공론화위의 작은 실수가 공



\* 자료 : 22~23일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700명 조사, 세계일보·공공의 창·우리리서치 공동조사

론조사 결과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론조사에 참여하겠는가란 물음에는 46.6%가 ‘참여할 뜻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뒤이은 36.2%가 ‘가 봐야 알겠다’고 답해 ‘참여할 뜻이 없다’(11.6%)는 사람보다 많았다. 가 봐야 알겠다는 응답자가 많은 것은 시민대표참여단 활동에 적잖은 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간을 써야 한다는 점, 공론화위에 대한 신뢰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민참여단(500명)으로 뽑히면 한 달 동안 원전 찬반 단체와 전문가들이 만든 자료집을 공부하고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2박3일간의 합숙에 참여해야 한다.

홍주현 국민대 교수(인론정보학)는 “공론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은 신고리 원전 중단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자신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참여할지 말지 ‘가짜야 알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찬성인데 반대로 정책이 진행되거나 또는 그 반대 상황이 벌어질 경우 적극 참여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집단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비율은 50대와 60대, 대구·경북에서, 신뢰하는 비율은 30~40대, 경기·인천, 대전·충청, 광주·전라에서 비교적 높았다. 공론조사 참여 의향은 50대와 남성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고 20대와 광주·전라 지역은 비교적 낮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건설 중단에 공감하는 층에서는 공론화위의 공론조사 결과를 신뢰하는 편인 데 비해 공론조사 참여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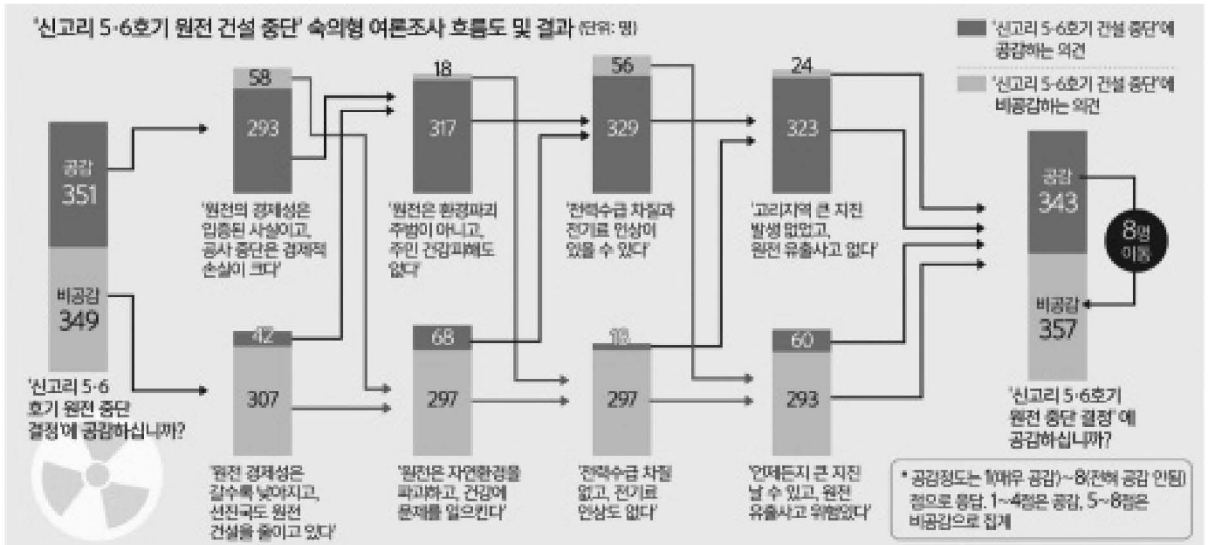
사는 건설 중단에 공감하지 않는 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론조사에 대한 신뢰도와 참여의사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와 마찬가지로) 정치지형을 반영하고 있다”며 “정부와 가까운 광주·전라에서는 공론조사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고 대구·경북은 그렇지 않으니 공론조사에 적극 참여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나와 다른 생각에 ‘흔들린 22%’… 찬반 이면의 민의 찾아야

지난 25일부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의 중단 여부를 평가할 공론조사가 시작했다. 공론조사는 ‘지금 현재의 찬반 의사’를 묻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달리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참여단을 뽑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낸다. 세계일보와 ‘공공의창’이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숙의형 여론조사는 공론조사의 온라인 축소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응답자 700명 중 153명(22%)이 설문 진행 과정에서 찬반을 오갔다는 점은 기존 여론조사의 한계를 보여준



다. 이 같은 의사 변경에도 최종 찬반이 여전히 오차범 위 내 접전을 보인다는 점에서 결과 이면에 숨은 민의를 찾아내는 ‘디테일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박진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단순히 반대론을 듣는 것으로도 22%가 의사를 바꿨다는 것은 단순 여론조사가 정확한 국민의 뜻을 알아보는 데 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 의견을 유지·변화시킨 포인트는?

이번 조사는 ‘나와 다른 생각을 들어본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응답자가 앞서 대답한 것과 반대되는 논리를 이어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컨대 A씨가 맨 처음 ‘신고리 건설 중단에 공감한다’고 답했다면, 두 번째 질문에서 ‘원전 경제성은 입증된 사실이고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손실이 크다’는 건설 중단 비공감(반대) 의견을 들어본 뒤에 대한 공감, 비공감으로 답하게 된다.

여기서 A씨가 공감, 즉 신고리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면 그다음 질문 단계에서 ‘원전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설 중단 지지 논리를 듣고 다시 공감·비공감을 선택하게 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전력수급과 안전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간 뒤 신고리 건설 중단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

조사 결과 처음에 ‘건설을 중단하는 편이 좋다’고 답한 이들은 경제성과 전력수급 차질 논란에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고, 환경피해와 안전성 논리로 기존 주장을 굳히는 경향을 보였다.

반대로 ‘건설을 중단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응답자들은 경제성과 전력수급 논리로 기존 입장을 유지했고, 환경피해와 안전성 문제로 기존 입장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원전의 경제성’에 회의적인 응답자(신고리 건설 중단 찬성 측) 중 94.6%는 ‘원전이 환경파괴를 부를 수 있다’고 답했지만, 이렇게 환경오염을 우



려한 이들 가운데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신고리 건설 중단 반대 논리에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 비율은 85.5%로 줄었다.

또 '원전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신고리 건설 중단 반대층 대부분(94.0%)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 전력수급 차질과 전기료 인상을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전력난을 걱정한 응답자 가운데 '원전 사고 가능성'을 부정한 비율은 83.0%에 그쳤다.

◆ 찬반 이면을 들여다보아야

경제성, 환경 등 네 가지 쟁점을 접한 뒤 다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공감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는 비공감이 공감보다 14명 늘어났다. 공감에서 비공감으로 8명이 옮겨간 것이다. 그러나 오차범위 내 백중세인만큼 어떤 요소가 의견 변화를 이끌었는지, 결과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최정묵 공공의상 간사는 "원래 공론조사는 찬반을 결정 짓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논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찬반 이면의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숙의형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가 "우리나라 정치지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체적인 결과는 50 대

50에 가깝지만 지역별·성별·연령별 인식차가 드러나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최종 결과를 기준으로 대전·충청은 55.2%, 광주·전라는 60.8%가 건설 중단에 공감한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66.8%가 건설 중단에 공감하지 않았다. 원전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에서는 원전 가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원전이 적거나 없는 곳에서는 환경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남성은 건설 중단 비공감 비율(57.9%)이, 여성은 공감 비율(56.4%)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더 차이가 뚜렷했다. 30~40대 중에는 건설 중단에 공감하는 쪽(각 74.5%, 67.2%)이 많았고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비공감 의견(66.3%, 79.1%)이 훨씬 많았다.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쟁점을 검토하고 난 뒤 가장 적극적인 공감·비공감층이 다소 줄었다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건설 중단에 대한 공감·비공감 정도에 점수를 매겨 의사를 표현했다. 처음 건설 중단에 대해 물었을 때는 '매우 공감한다'(1점)가 282명, '전혀 공감 안 된다'(8점)는 275명이었지만 최종 질문 단계에서는 '매우 공감한다'가 263명, '전혀 공감 안 된다'는 246명으로 줄었다. 🍌